

윤석열정부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

차례

I 개혁

| | | |
|----|----------------------|----|
| 01 | 미래인재를 키우는 교육개혁 | 8 |
| 02 | 노동개혁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 | 10 |
| 03 |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 12 |
| 04 |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 14 |

II 경제

| | | |
|----|----------------------------|----|
| 05 | 민생경제 회복 및 경제체질 선진화 | 18 |
| 06 | 상생의 금융, 기회 사다리 확대 | 20 |
| 07 |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 22 |
| 08 |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및 원전산업 질적 고도화 | 24 |
| 09 | 국민 주거안정 강화 | 26 |
| 10 | 킬러·생활규제 혁파 | 28 |
| 11 | 5대 수출강국을 위한 도전 | 30 |
| 12 | 국가 첨단전략산업 지원 | 32 |
| 13 | 함께 잘사는 농산어촌 | 34 |

III 사회

| | | |
|----|-------------------|----|
| 14 | 총총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 38 |
| 15 |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 40 |
| 16 | 국민 일상 속 안전 강화 | 42 |
| 17 | 민생을 위한 디지털 혁신 | 44 |
| 18 |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 보호 | 46 |
| 19 | 문화·관광 경제적 가치 창출 | 48 |

IV 미래

| | | |
|----|--------------------|----|
| 20 | 미래전략기술 육성 | 52 |
| 21 |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기틀 마련 | 54 |
| 22 | 미래를 위한 청년 지원 확대 | 56 |
| 23 |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추진 | 58 |
| 24 | 교통혁신을 통한 격차 해소 | 60 |
| 25 |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 62 |

V 외교 안보

| | | |
|----|--------------------|----|
| 26 | 한미일 협력 강화 | 66 |
| 27 |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 제고 | 68 |
| 28 | 재외동포 지원 강화 | 70 |
| 29 | 핵심전력 확보로 튼튼한 안보 구축 | 72 |
| 30 |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 74 |

**윤석열정부는 지난 2년간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는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개혁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경제

역동적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와 국민의 일상 속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래

첨단전략기술 육성, 청년지원 확대, 교통혁신 등을 통해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

한층 강화된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 일류보훈 국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

개혁



미래인재를 키우는 교육개혁

“우리가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이 교육을 통해서 그 사회의 어떤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우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의 다양성입니다.”

| 2023년 업무보고, 2023.1.5. |

국가 책임 교육·돌봄

늘봄학교 확대

459교
(23년)

2,838교
(24.3월)

모든
초등학교
(24.2학기)

늘봄학교 내 초1 참여학생 수

약 14만 명, 74.3%(24.3.29. 기준)

유보통합 추진

유아 교육 및 보육업무 관리체계
교육부로 일원화



15개 선도교육청 운영
(23년)

교육 회복과 대전환

디지털 교육 혁신

디지털
새싹 캠프 도입
(초·중·고생,
21만 명)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로드맵
(23.6월)

교권보호

- ☑ 교권보호 5법 개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 ☑ 교권침해 직통전화 1395 개통

사교육 카르텔 허파

- ☑ 문항거래 관련 교원 등 엄중 조치
- ☑ 킬러문항 배제 공정수능 실현
(23.11.16.)

학교폭력 근절

- ☑ 모든 교육지원청(176개) 내 학교폭력제로센터 설치
-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

벽을 허무는 대학 개혁

RISE* 시행

지방으로 대학 지원권한 위임

'23년 7개 시도 → '25년 전국 시행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글로벌대학 지정

'23년 10개 → '24년 20개

대학생 학자금 · 장학금 지원 확대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준 유지
· '23학년도 기준 1.7%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 1~3구간 50만 원
· 4~6구간 30만 원 인상

생활비 대출한도 확대
· 연 350만 원 → 연 400만 원

미래 청사진

늘봄학교

희망하는 학생·학부모 누구나 만족하며 누릴 수 있는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국가돌봄(Public Care) 체계 확립

'24 초1 → '25 초1~2 → '26 모든 초등학교

디지털 교육혁신

AI 디지털교과서로 학생별 맞춤 교육을 제공하고 교사와 학생 간 인간적 연결을 강화해 깨어있는 교실로 탈바꿈

'25 영어, 수학, 정보, 특수교육 국어 → ~'28 국어, 사회, 과학, 기술·가정 등

글로벌대학

대학 내·외의 벽을 허무는 담대한 혁신을 통해 대학-지역의 동반성장 견인

'23 10개 → '24 20개 → '26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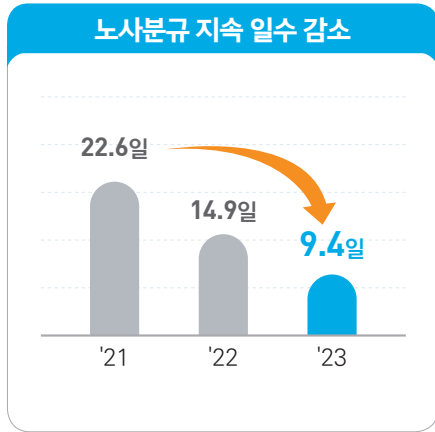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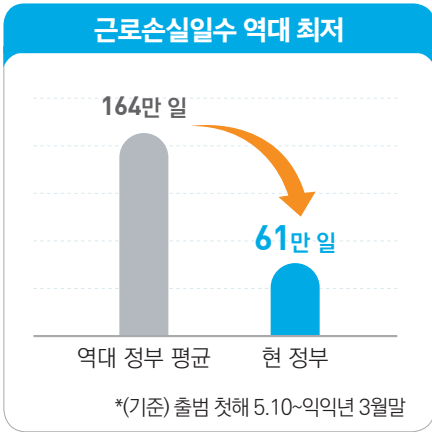


노동개혁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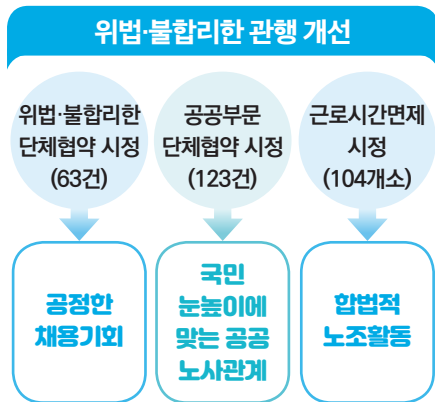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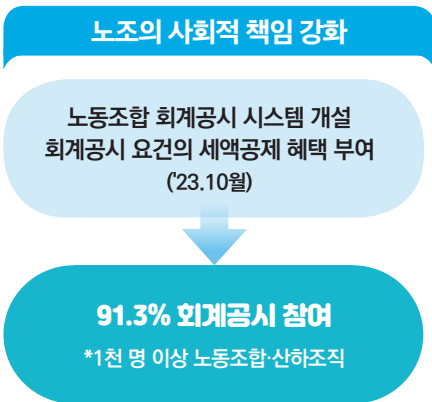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입니다.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 2024년 대통령 신년사, 2024.1.1. |

노사법치주의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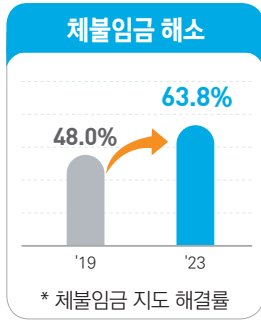
합리적 노조활동 보장



노동시장 약자 보호

임금체불 엄단

- ☉ 상습체불 근절대책
- ☉ 체불근로자 지원
- ☉ 구속수사 확행



차별시정

- ☉ 비정규직 차별없는 일터지원

255개 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2,458명 → **1인당 임금 81만 원 상승** ('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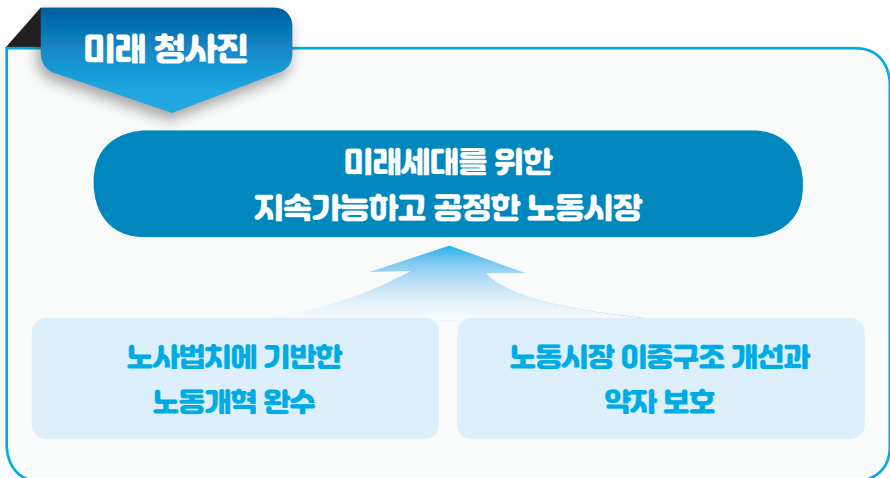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 확산

- ☉ 조선업('23.2월)
- ☉ 석유화학('23.9월)
- ☉ 자동차('23.11월)
- ☉ 항공우주('24.2월)
- ☉ 식품제조('24.2월)

사회적 대화 3대 의제 설정

- ☉ 일·생활 균형
- ☉ 인구구조 변화 대응
- ☉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2024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2023.10.31. |

국민과 함께하는 연금개혁

사회적 논의

전문가

3개 자문위원회

재정계산委

추계전문委

기금운용전문委

80여 차례 회의 개최

국민

청년·특고직 등 이해관계자별 FGI 실시(24회)

공청회 및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2,025명 대상) 등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 발표

제5차 재정추계 결과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개편 목표, 제5차 종합운영계획 발표('23.10월)

5대 분야 15개 추진과제

- 1 노후소득보장**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실질 소득제고, 급여제도 개편
- 2 세대영평**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크레딧 확대, 재정방식 개선
- 3 재정안정** 보험료율 인상, 수급개시연령 조정, 국고지원 확대
- 4 기금운용 개선** 기금수익률 제고, 투자 다변화·운용 인프라 강화, 자산배분체계 개선
- 5 다층체계 정립** 기초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사적연금 활성화, 실태 정밀 분석

미래 청사진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상생의
연금개혁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할 골든 타임입니다.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024.2.1. |

의료개혁 4대 과제 발표('24.2월)



1 의료인력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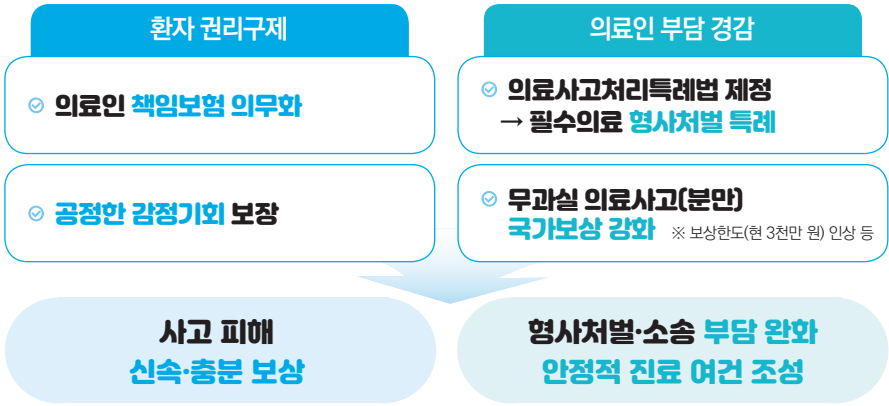
| 의대정원 확대 | 교육·수련 혁신 | 인력운영 혁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년 수급고려 현장문제 해소 수준(1.5만 명 부족) ☑ 의대 교육 투자 ☑ 주기적 조정체계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 임상역량 중심 인턴제 개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의 중심병원 단계적 전환 ☑ 임상수련 연계 개원면허 검토 |

2 지역의료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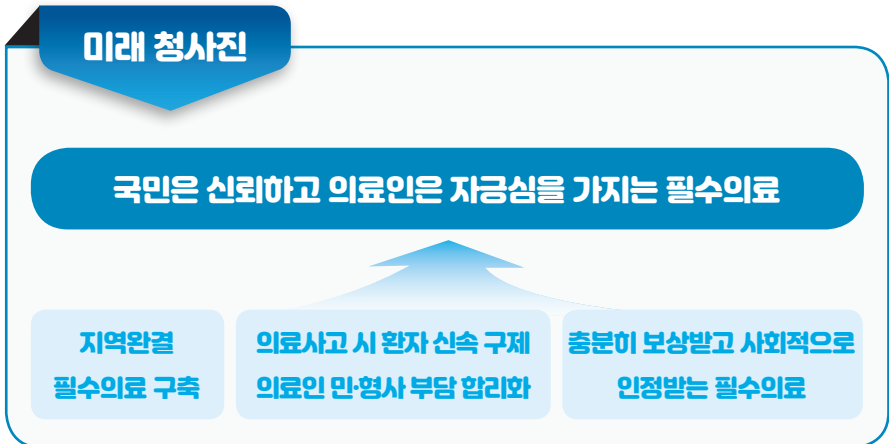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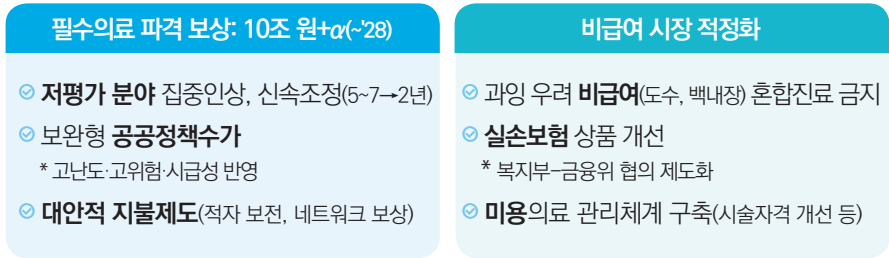
| 의료체계 혁신 | 지역필수의사 확보 | 투자 확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병원 집중 육성 ☑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 ☑ 협력진료 보상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인재전형 대폭 확대 ☑ 지역의료 교육·수련 강화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수가 확대 ☑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 맞춤 지원을 위한 진료권 재설정 |

의료기관 역할에 맞는 상생·협력 의료전달체계 확립

3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4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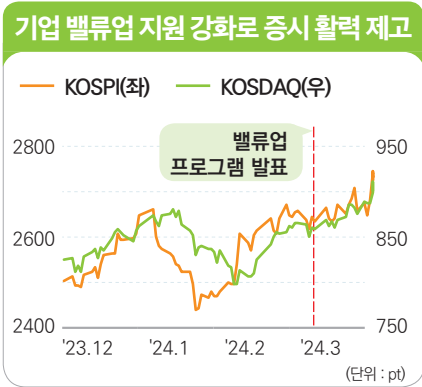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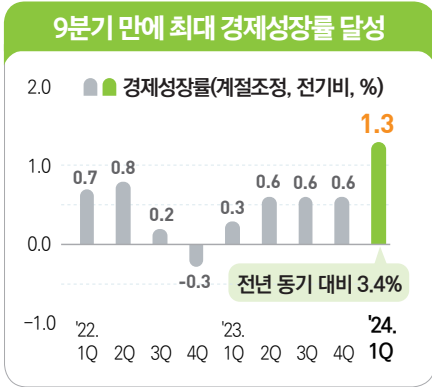
경제

민생경제 회복 및 경제체질 선진화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건전재정 기초를 확립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면서도,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한다는 철학으로 국가 재정을 운용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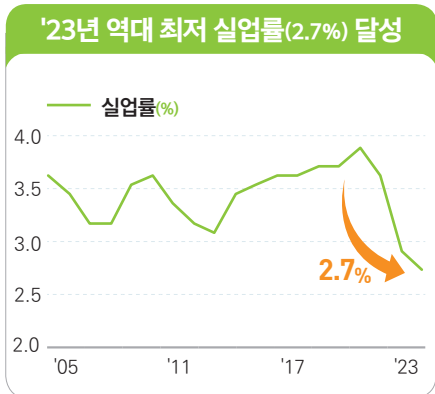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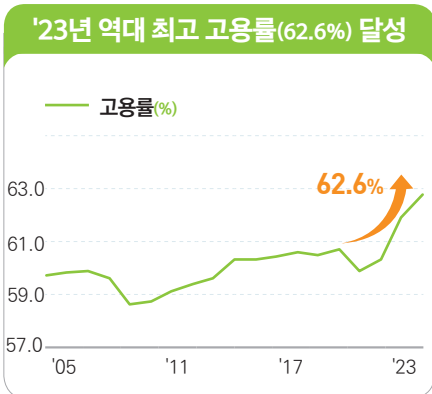
| 국무회의, 2024.3.26. |

주요 거시경제 지표 안정적 관리



※ '23년 물가·성장 등 경제실적 종합평가 결과, OECD 35개국 중 2위(Economist, '23.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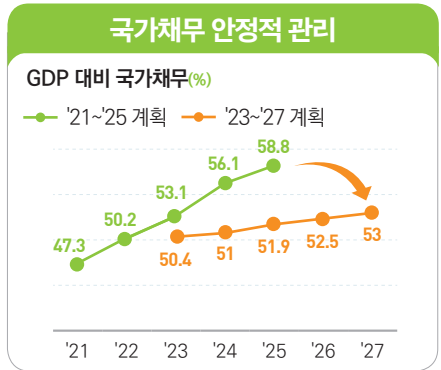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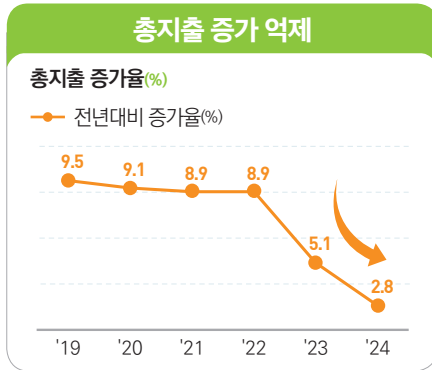
역대 최고 고용률 및 역대 최저 실업률 달성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 신용평가사 | 신용등급 | 등급전망 |
|---------|------|------|
| Moody's | Aa2 | 안정적 |
| S&P | AA | 안정적 |
| Fitch | AA- | 안정적 |

건전재정 기조 확립



미래 청사진



위기 극복 및 경제 재도약을 통해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27년까지)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으로
미래세대 부담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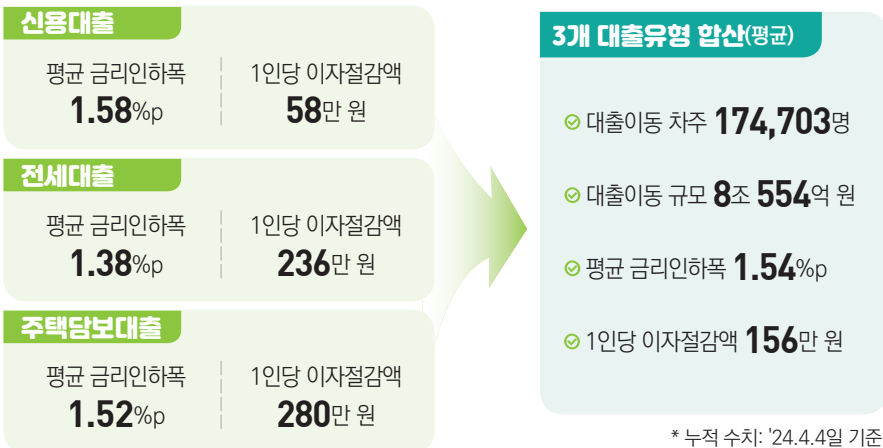


상생의 금융, 기회 사다리 확대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입니다.”

|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2024.1.2. |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및 비과세 한도 확대 추진

* ISA 가입자 수(만 명): ('22말) 463, ('23말) 493, ('24.2월) 511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마련('24. 2월)

기업의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가이드라인,
세제 지원 등)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 및
투자 유도
(코리아 밸류업 지수·ETF
개발, 투자지표 비교공표 등)

거래소 중심의
전담 지원체계 구축

공매도 제도 개선

'24.6월말까지 공매도 금지
('23.11.5.)

*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의
차입공매도는 허용

근본적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

- ⊙ 대차거래와 대주제도 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 ⊙ 기관투자자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화
- ⊙ 무차입공매도 형사처벌 강화, 제재수단 다양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으로
국민 자산형성 지원

국내기업
저평가 방지로
자본시장 역할 강화

미래 청사진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기회의 사다리**'로 도약

고금리 부담 경감

국민 자산형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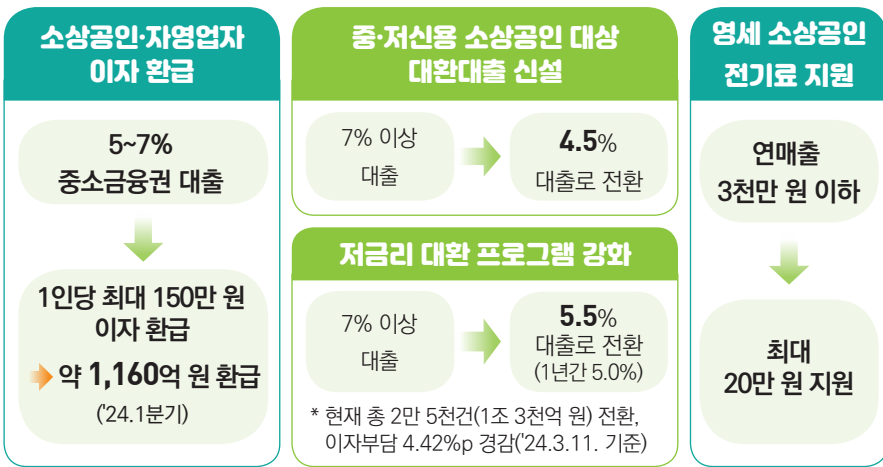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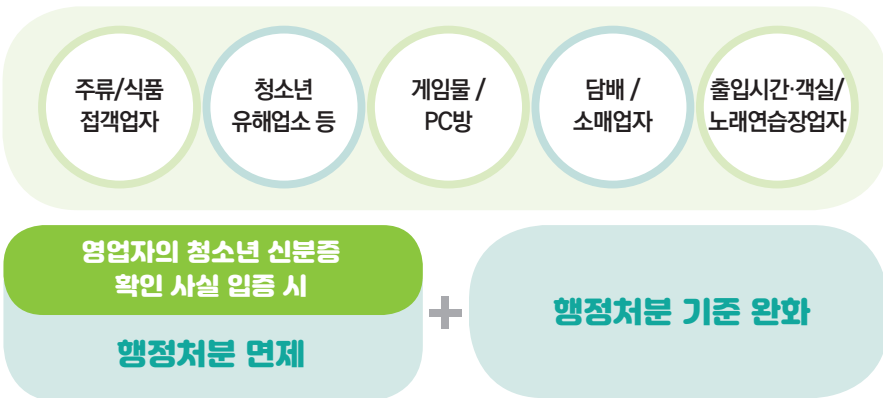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입니다.”

| 2024년 대통령 신년사, 2024.1.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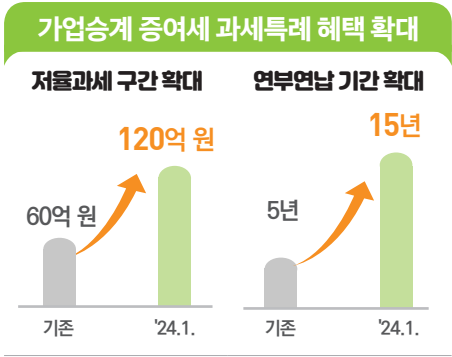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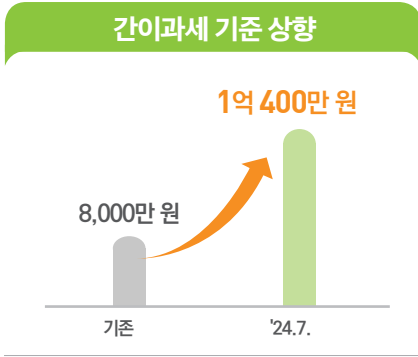
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세제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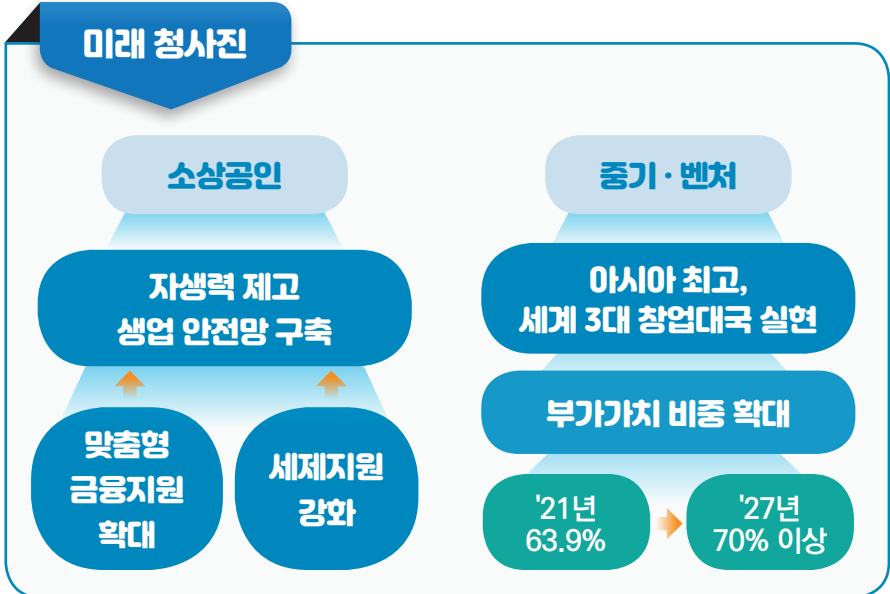
중소·벤처 경쟁력 강화 지원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23.10월~)
* 10,518개사 동행기업 참여

신개념 지역기업 성장 프로젝트
「레전드 50+」 추진 ('24.1월)
* 1,354개사에 3년간 1.1조 원 지원(정부·지자체)

스타트업코리아 펀드 출범 ('24.4월)
* '24년 총 8,000억 원 규모 벤처펀드 조성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23.11월)
*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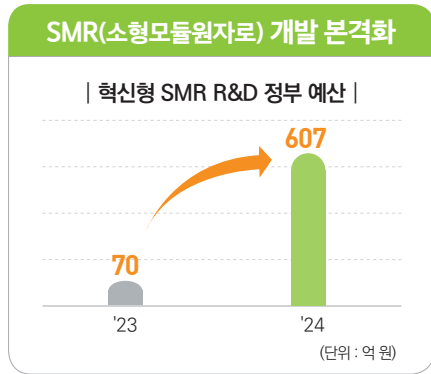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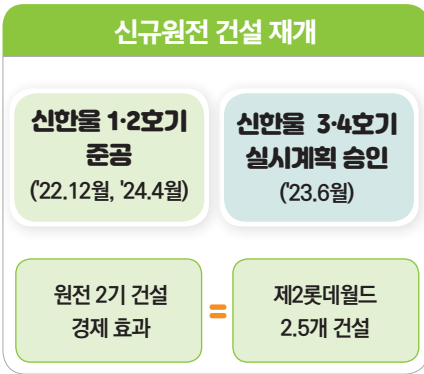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및 원전산업 질적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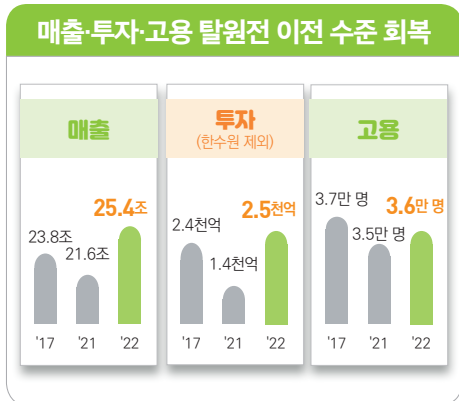
“원자력은 우리 에너지 안보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의 민생이라는 것을 따져보면 원전이 곧 민생입니다.”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024.2.2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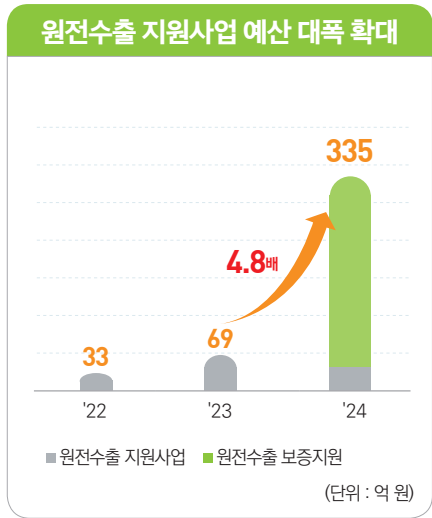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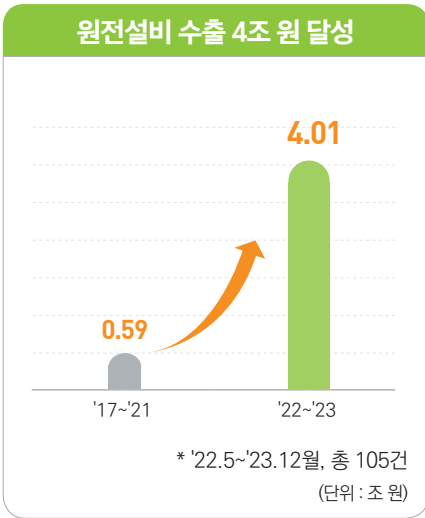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전정책 정상화



원전 생태계 주요 지표 개선



정부 출범 이후 원전설비 수출 4조 원 달성



미래 청사진

탄탄한 원전 생태계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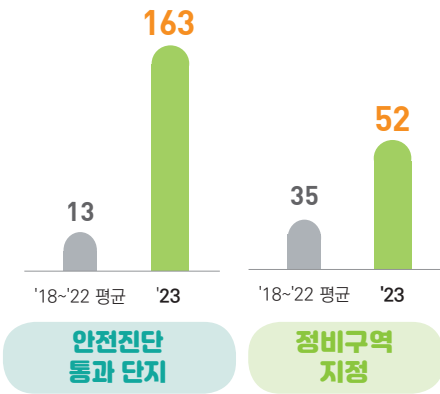


국민 주거안정 강화

“살기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곳에서는 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권리입니다.”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024.1.10. |

도심 주택공급 기반 획기적 확충



재건축 3대 규제 개선

- 안전진단 기준 개선, 재건축부담금 개편, 정비사업 필수비용 분양가 반영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 준공 30년 도과 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허용 추진 중
-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정

다변화되는 주택수요 적극 대응

소형주택 공급규제 개선

◎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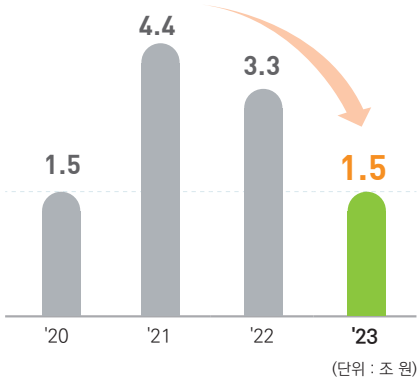
◎ 도시형생활주택 방 설치 제한 폐지
주차장 기준 완화
추진 중

◎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부담 경감

세제·대출 규제 합리화

종부세 부과액



종합부동산세 합리화

⊙ 주택분 종부세 세액 '20년 수준 환원

신속 소형주택 종과 부담 완화

⊙ 향후 2년간 세제 산정시 주택수 제외 (60㎡ 이하)

대출규제 완화

⊙ 고가주택(15억 원 ↑) 주택담보대출 규제 폐지

⊙ 9억 원 ↑ 주택 중도금대출 규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

부동산시장 안정화

현 정부 들어 주택가격 하락

전국
-13.9%

서울
-14.2%

*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기준, 정부 출범 시 대비 '24.4월 기준

미래 청사진



규제에서 지원으로
재개발·재건축
패러다임 전환

+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경제 10

킬러·생활규제 역파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걷어내야 합니다.” |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 2023.7.4. |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습니다.”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024.2.21. |

킬러규제 역파로 기업투자 촉진

| | | | |
|-------------------------|--|---|---------------------------------------|
| 산업단지 입지규제 역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 중심 산업 첨단·신산업 입주 허용 카페·체육관 등 생활·편의시설 설치 면적 확대('23.8월) 등 | ➔ | 4.4조 원 투자유발 (광양산업 투자 장애 해소) |
|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0.1t → 1t) 환경 영향 크지 않은 사업 평가협의 면제 첨단산업 불소 배출기준 합리적 개선 | ➔ | 3,000억 원 이상의 기업 부담 경감 |
|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고용허가제(E-9) 규모 대폭 확대 ('24년 16.5만 명)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로 확대 | ➔ | 기업인력난 해소 (빈자리 21만 개) |

생활규제 역파로 국민편의 증진

| 단말기유통법 폐지 추진 |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 | | | | | | | | |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e0f2f1;">폐지 전</th> <th style="background-color: #00bcd4; color: white;">폐지 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 단말기 지원금 경쟁 제한 사업자 지원금 공시제도 </td> <td style="padding: 5px;"> 제한 없는 지원금 경쟁 ↑ </td> </tr> <tr> <td style="padding: 5px;"> 과도한 단말기 구입비 국민들의 단말기 지원금 </td> <td style="padding: 5px;"> 단말기 구입비 부담 완화 ↓ </td> </tr> <tr> <td style="padding: 5px;"> 선택요금할인 요금 할인 </td> <td style="padding: 5px;"> 선택요금할인 유지 </td> </tr> <tr> <td style="padding: 5px;"> 지원금 규제 규제 체계 </td> <td style="padding: 5px;"> 시장 자율 </td> </tr> </tbody> </table> | 폐지 전 | 폐지 후 | 단말기 지원금 경쟁 제한 사업자 지원금 공시제도 | 제한 없는 지원금 경쟁 ↑ | 과도한 단말기 구입비 국민들의 단말기 지원금 | 단말기 구입비 부담 완화 ↓ | 선택요금할인 요금 할인 | 선택요금할인 유지 | 지원금 규제 규제 체계 | 시장 자율 | <div style="background-color: #e0f2f1; padding: 10px; border-radius: 10px; 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 공유일 → 평일 의무휴업 전환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e0f2f1; padding: 10px; border-radius: 10px; 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 </div>  |
| 폐지 전 | 폐지 후 | | | | | | | | | | |
| 단말기 지원금 경쟁 제한 사업자 지원금 공시제도 | 제한 없는 지원금 경쟁 ↑ | | | | | | | | | | |
| 과도한 단말기 구입비 국민들의 단말기 지원금 | 단말기 구입비 부담 완화 ↓ | | | | | | | | | | |
| 선택요금할인 요금 할인 | 선택요금할인 유지 | | | | | | | | | | |
| 지원금 규제 규제 체계 | 시장 자율 | | | | | | | | | | |

토지이용 자유 확대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개발제한구역(GB) 혁신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
GB 해제총량 예외 인정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
환경평가 1~2등급지
GB 해제 허용

농지이용규제 합리화

농지 내 수직농장 설치 허용

자투리 농업진흥지역 정비
(3ha 이하)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미래 청사진

국민 부담 경감·기업 투자 촉진을 통한
민생 경제 활력 제고

정부출범 이후
'24. 4월말까지

2,200여건
규제혁신
과제 완료

+

약 132조 원의
경제효과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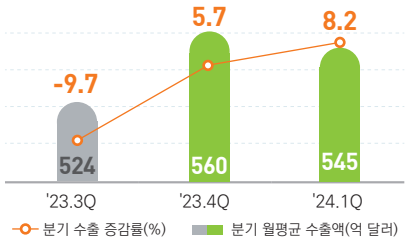
5대 수출강국을 위한 도전

“수출이 늘면서 경제 회복과 성장을 이끌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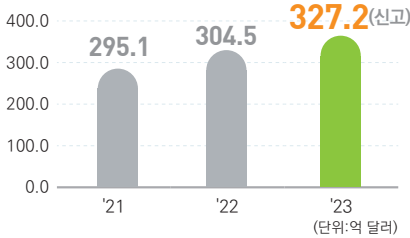
|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 격려사, 2024.1.12. |

역대 최대('22년)·3위('23년) 수출, 역대 최대 외국인직접투자유치 달성

수출 플러스 달성('23.10월)으로 위기 극복



역대 최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상 세일즈 외교로 대규모 경제성과 창출

우리 기업 현지 진출기회 크게 확대

중동 Big3
경제성과
853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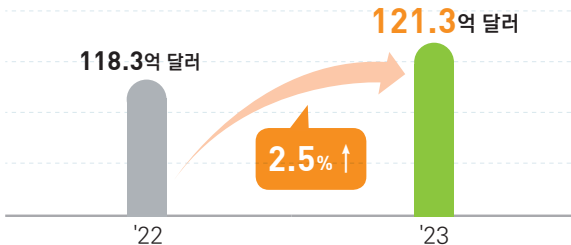
해외순방
18개국

투자유치
(신고기준)
65.8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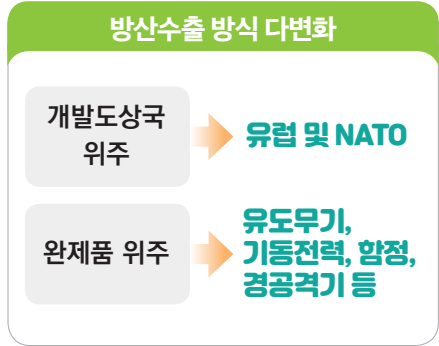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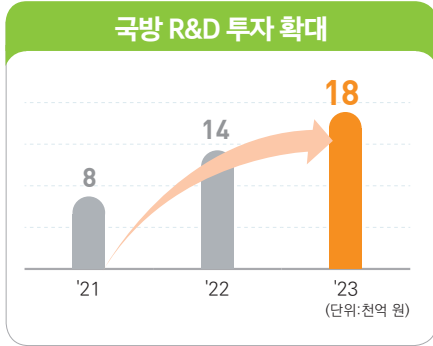
- ⊙ 베트남 역대 최대 계약 등 체결 (111건)
- ⊙ 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

역대 최고 K-Food* 수출 실적 달성

* 농식품+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국방 R&D 투자 확대 및 방산수출 방식 다변화



미래 청사진

수출

2027년
세계 5위 달성

(자동차) **글로벌 3강 도약**(30년)
(현재 6위, 생산량 기준)

(조선) **미래선박 수주 점유율 80% 이상**(30년)

K-Food⁺

'24~'27년 수출
연평균 20% 성장 달성

121억 달러
2023년

135억 달러
2024년

230억
달러
2027년

2배

20조 원

40조 원

방산

방산수출 4대 강국
(현재 10위)

국방과학기술 7대 강국
(현재 9위)

방위산업 규모 2배 확대(2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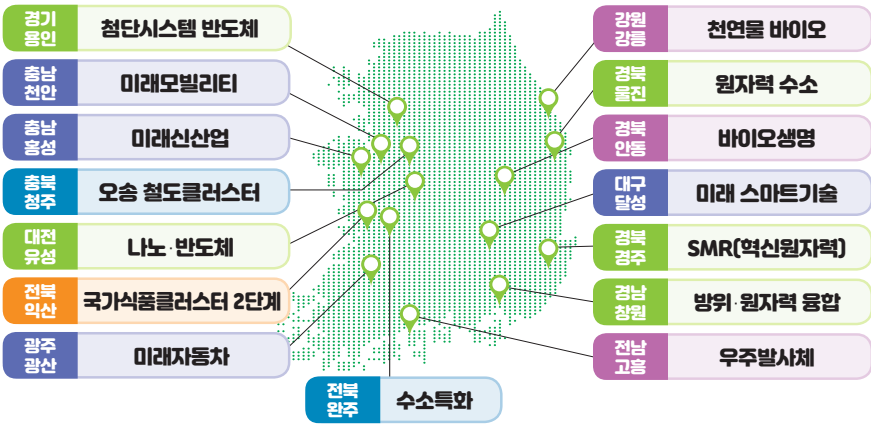
국가 첨단전략산업 지원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 전략자산으로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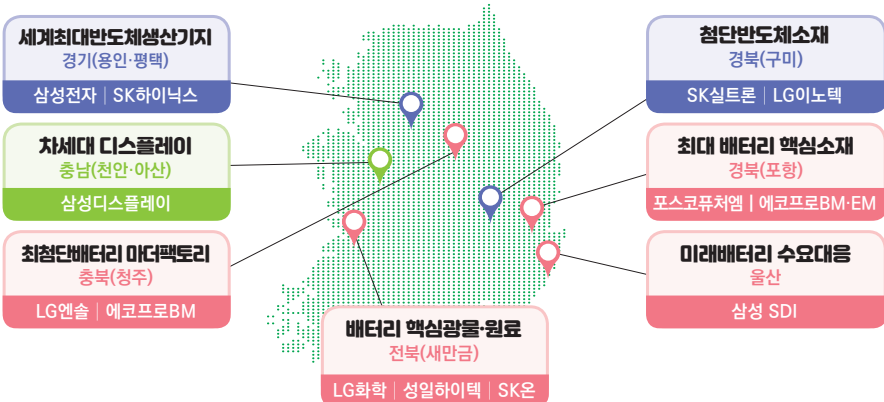
|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2023.3.15. |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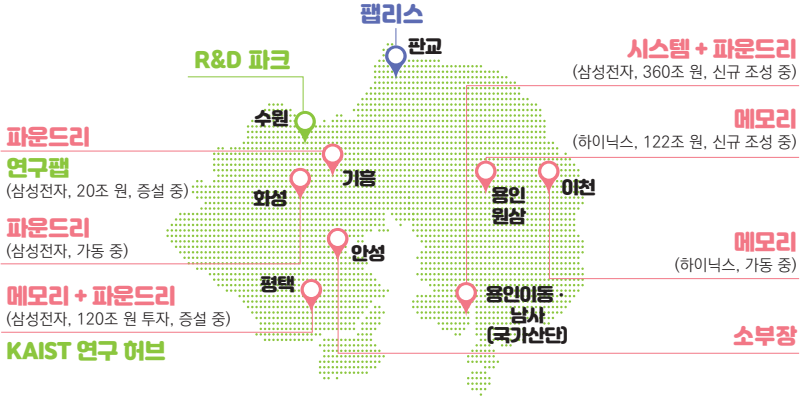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산업 벨트 조성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681조 원 이상의 민간투자 지원)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4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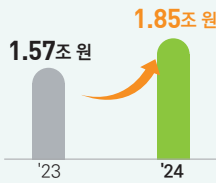
세계 최대 규모(2,102만㎡)
생산량(770만장/월)

24조 원 정책자금 공급
('24~'26년)

첨단산업 지원 확대 및 첨단인재 양성

*대·중견기업 8 → 15%
중소기업 16 → 25% +
임시투자(증가분) 4 → 10%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지원 강화



국가첨단전략기술
R&D 투자 확대

- 반도체 특성화대학 및 특성화대학원 지정
- 반도체·배터리 아카데미 운영

반도체 혁신인재
15만 명+α 육성

미래 청사진

종합반도체
(메모리·시스템)
선도국 도약

디스플레이
세계 1위 탈환

이차전지
세계 최강국

바이오 의약품
제조역량
세계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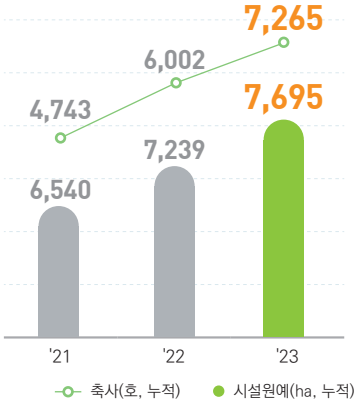
함께 잘사는 농산어촌

“농어민이 사는 농촌과 어촌이 정말 살만한 마을과 고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제2차, 3차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 2023.1.4. |

스마트농업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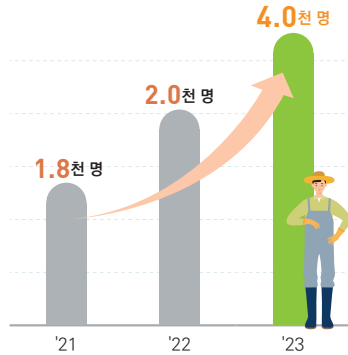
스마트 온실 및 축사 보급 확대



예) 시설원에 스마트팜 적용 후 농업소득 45.9% ↑, 단위면적당 생산량 32.1% ↑, 자가노동시간 7.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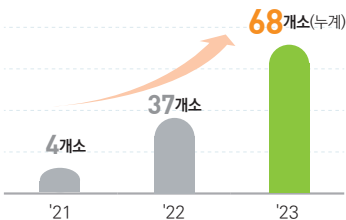
청년농업인 육성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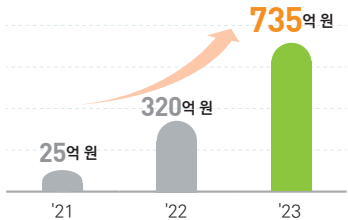


농촌 주거환경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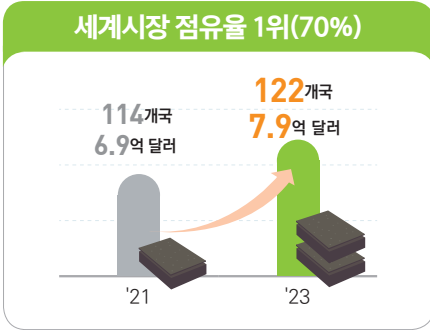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



농촌공간정비사업 예산 대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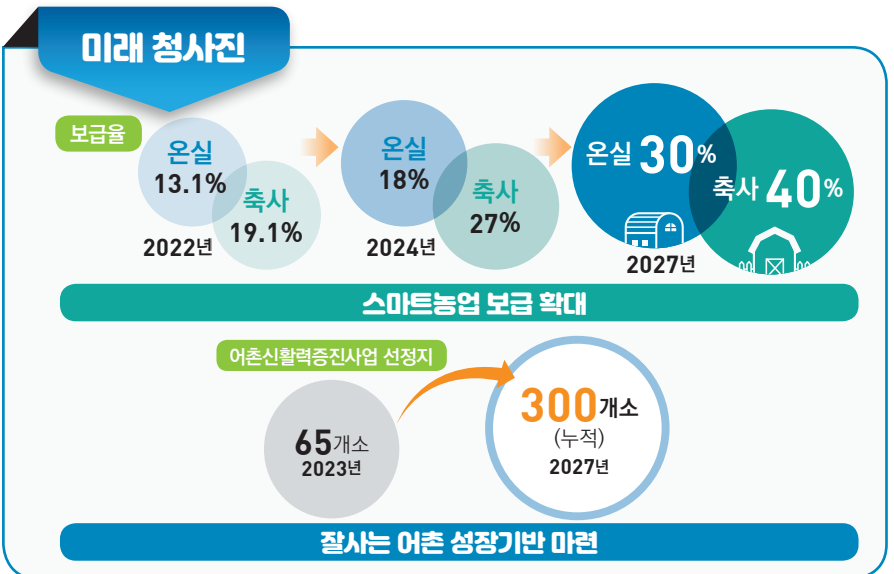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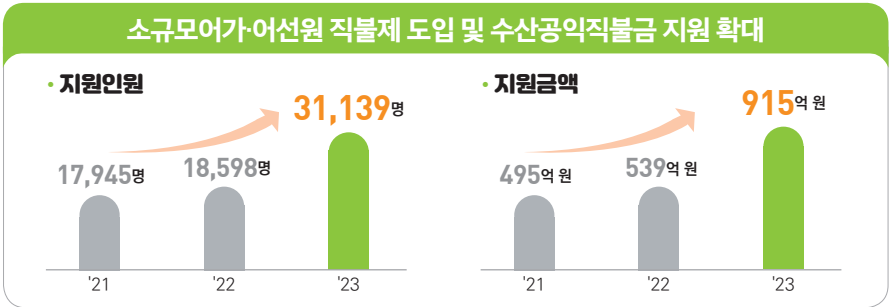
역대 최대 김 수출 7.9억 달러(1조 원) 달성



어촌 신활력증진사업 추진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도입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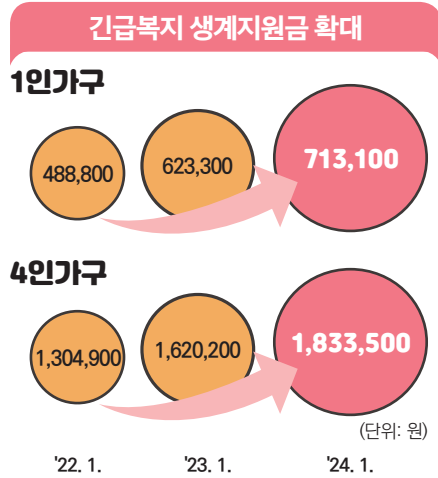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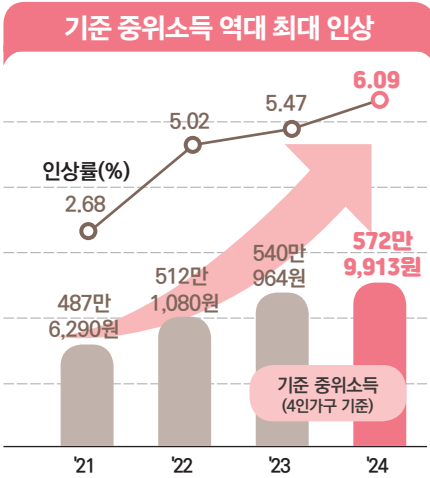


촉촉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더 촉촉하고 더 두텁게 챙기겠습니다.”

|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 2024.3.15. |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 및 지원대상 확대



장애인 맞춤형 지원 강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전국 시행 ('24.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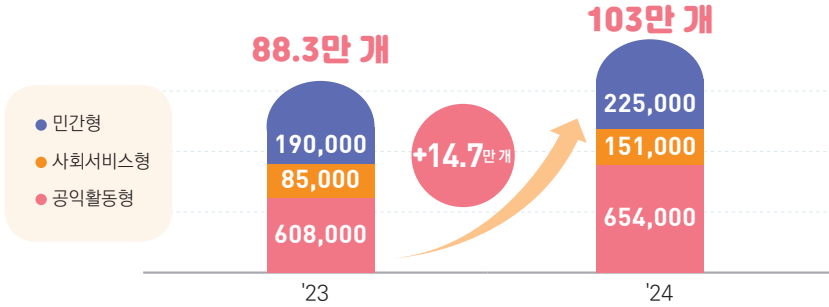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 24시간 개별돌봄(340명)
- 주간 개별돌봄(500명)
- 주간 그룹돌봄(1,5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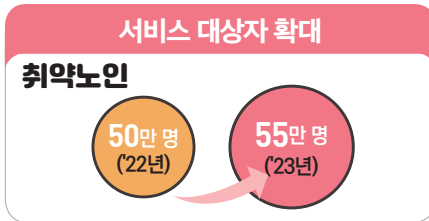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추진

- 모의적용('23년)
- 8개 지역 시범사업 추진('24.6월~)

노인일자리 역대 최대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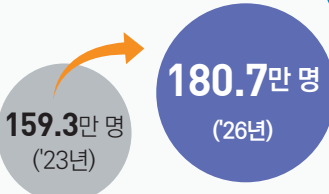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



미래 청사진

생계급여 수급자 확대



노인일자리 확대

전체 노인인구의
10% 일자리 제공
('27년)

장애인 맞춤형 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시행
('24.6월)

장애인 개인예산제

본사업 시행
('26년)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 2024년 대통령 신년사, 2024.1.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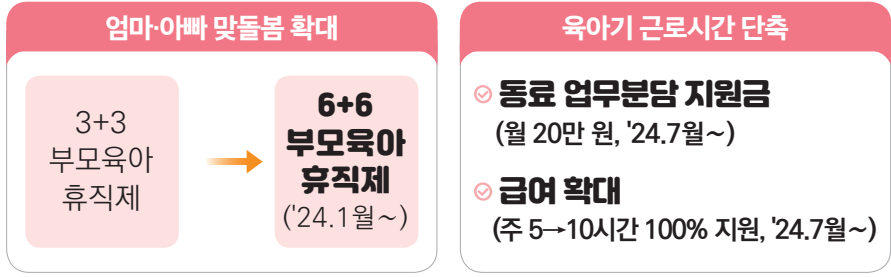
출산·임신 및 양육 지원 강화

| | | |
|--|---|---|
| <p>난임·다둥이 지원</p> <p>난임부부 시술비 보편지원(소득무관)</p> <p>임신 준비 부부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설 (여 13만 원, 남 5만 원)</p> <p>임신·출산 바우처 태아당 100만 원 지원</p> | <p>부모급여 확대</p> <p>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23년)</p> <p>▼</p> <p>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24년)</p> | <p>첫만남이용권 지원 확대</p> <p>200만 원 (출생순서 무관)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p> <p>'23 '24</p> |
|--|---|---|

돌봄 지원 확대

| <p>인프라 확충</p> <p>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제고</p> <p>'22 25.3% → '23 28.3% (3.0%p ↑)</p> <p>공공보육이용률 제고</p> <p>'22 36.8% → '23 40.0% (3.2%p ↑)</p> | <p>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p> <table border="1"> <tr> <th>지원시간</th> <th>이용가구</th> </tr> <tr> <td>'22 840 → '23 960</td> <td>'22 7.8만 → '23 8.6만</td> </tr> </table> | 지원시간 | 이용가구 | '22 840 → '23 960 | '22 7.8만 → '23 8.6만 |
|--|---|------|------|-------------------|---------------------|
| 지원시간 | 이용가구 | | | | |
| '22 840 → '23 960 | '22 7.8만 → '23 8.6만 | | | | |

일·가정 양립 지원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추진





국민 일상 속 안전 강화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됩니다. 전례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 국무회의, 2023.7.18. |

예측·예방 중심 재난관리 체계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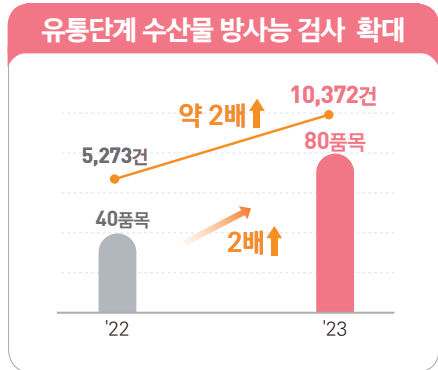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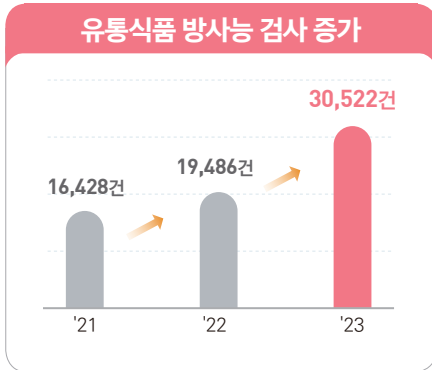
위험지역 관리 강화 및 자연재난 제도 정비



생활안전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방사능 걱정없는 안심 먹거리 유통



미래 청사진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

재난관리 체계 혁신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



민생을 위한 디지털 혁신

“국민들께서 원하는 서비스가 한 곳에서 맞춤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식, 2022.9.2. |

구비서류 없는 원스톱행정서비스 확대

구비서류 요구 공공서비스 정비

총 1,498개 공공서비스 중

122개 정비
(~'24.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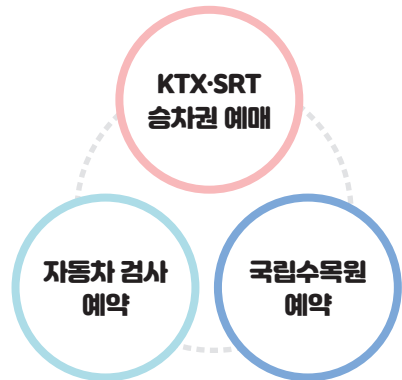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 사무정비

총 2,145개 요구 사무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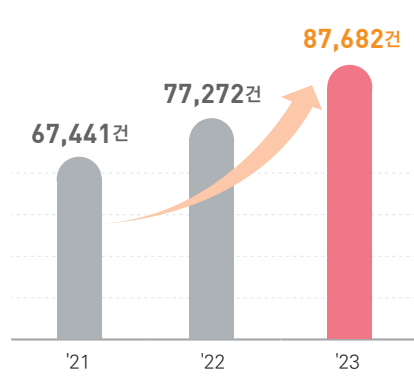
403개 정비
(~'24. 3월)

공공서비스·데이터 개방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총 8종)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국민 편의 증진 서비스 도입·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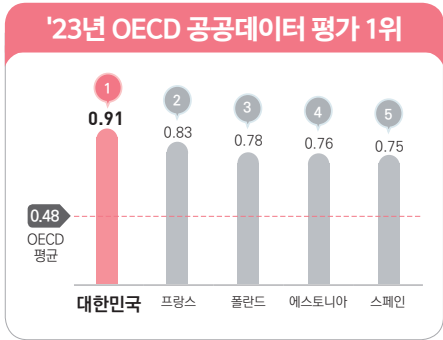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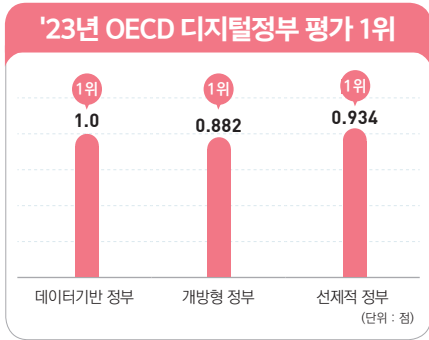
모바일 신분증 발급 활용

- Ⓞ 모바일 운전면허증('22.7월~)
- Ⓞ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23.8월~)
- Ⓞ 삼성윌렛에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활용('24.3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 기존 | 개선 |
|--------------------------|---------------------------------|
| 청구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 | 소비자 요청 시 병·의원·약국에서 전송('24.10월~) |

국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 달성



게임이용자 권리 강화

- ### 게임이용자 권익구제 제도 신속 도입 및 개선
- 1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 제도 도입
 - 2 확률형 아이템 관련 모니터링단 구성·운영(24명) 등 사후 관리체계 마련
 - 3 게임소액사기 전담수사관 지정(전국 150개 경찰서, 246명)
 - 4 환불 전담창구 운영 규정 등 포함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 5 콘텐츠진흥원-소비자원 간 업무협약 통한 게임이용자 집단분쟁 지원

미래 청사진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모바일 신분증으로

'지갑없는 디지털 사회' 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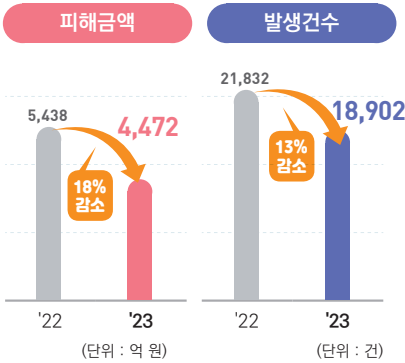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 보호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민생침해범죄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 국무회의, 2023.4.18. |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처

보이스피싱 범죄 범정부 총력 대응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 설립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 설치



범죄신고·상담, 피해구제, 수사

스토킹범죄 엄단 및 피해자 보호 강화

가해자 처벌

- 반의사불벌죄 폐지
- 온라인 스톱킹 유형 신설
- 판결 선고 전 전자발찌 부착

피해자 보호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 가해자 접근사실 자동 문자전송 및 경찰 출동

전세사기 범정부 총력 대응

가해자 처벌

-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
- 법정 최고형 구형 등 처벌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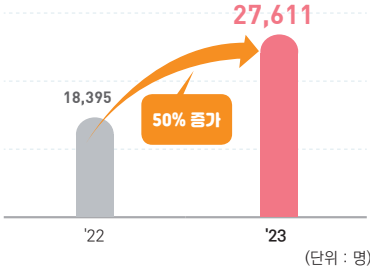
피해자 보호

- 임차인 대항력·우선변제권 강화
- 피해자 주거권 보장(특별법 제정)
- 피해자 법률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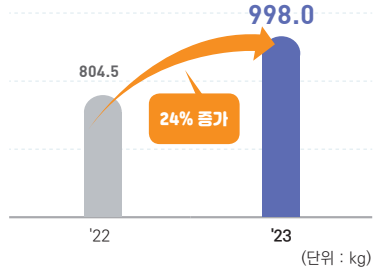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추진

범정부 총력 대응

마약사범 단속 추이



마약류 압수량 추이



마약류 안전망 강화

감시단속

- Ⓞ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974명)
- Ⓞ 마약류 판매광고 24시간 감시·적발

사범처리

- Ⓞ 마약범죄 양형기준 강화
- Ⓞ 미성년자 대상 유통 시 사형 구형 등

치료재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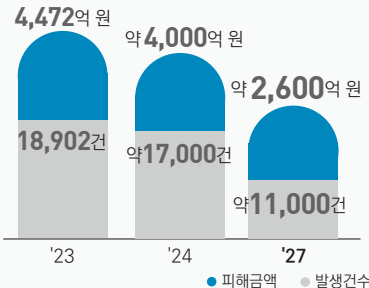
‘사범-치료-재활 연계모델’
시범운영

예방교육

초중고 및 청소년 복지시설 대상
마약예방 강연

미래 청사진

보이스피싱 피해 감축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 20명 미만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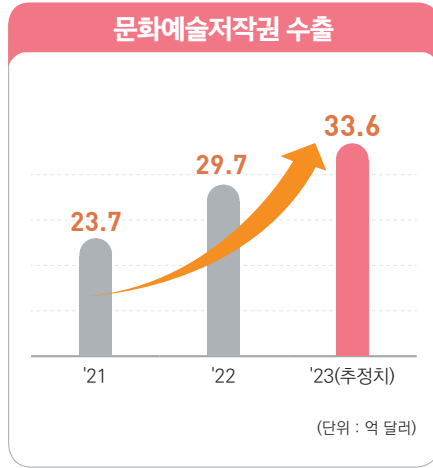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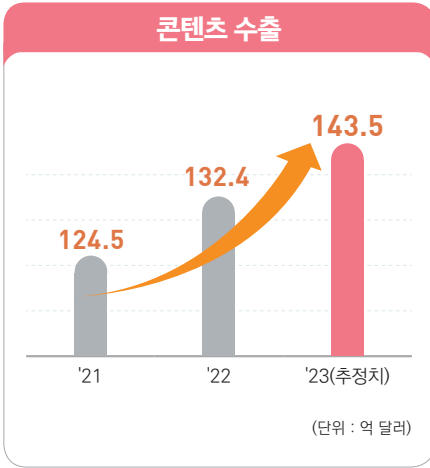


문화·관광 경제적 가치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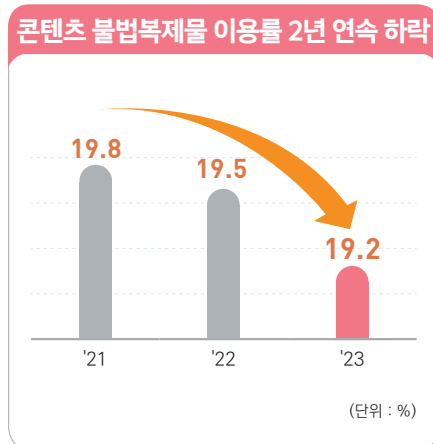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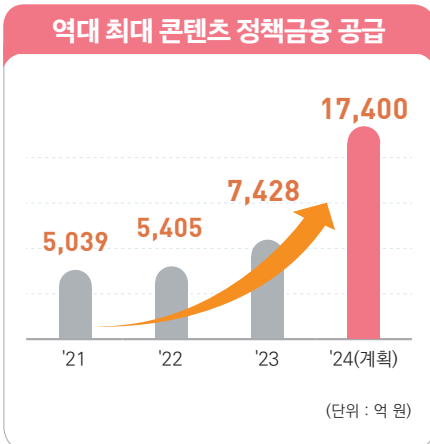
“문화예술, 관광을 토대로 수익과 경제가치를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야 합니다.”

| 2024년 업무보고, 2024.2.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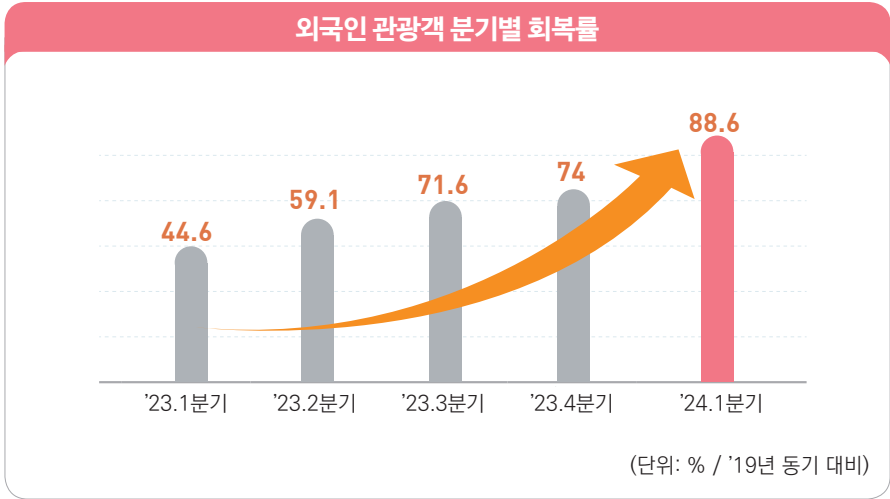
사상 최대 콘텐츠 수출 달성



콘텐츠 지원 및 보호 강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 수출 확대



미래 청사진

콘텐츠 수출 확대

'27년 **250**

'24년 155

'22년 132

(단위: 억 달러)

관광 수입 확대

'27년 **300**

'24년 245

'19년 207

(단위: 억 달러)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IV

0124



미래전략기술 육성

“AI, 첨단바이오, 쿼텀 등 3대 게임체인저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 2024.1.5. |

첨단바이오, 양자 등 분야별 집중 육성

첨단바이오 분야 마스터플랜 마련

제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23.6월)

합성생물학 핵심기술개발 및 확산전략(23.10월)

제4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23.6월)

바이오 선도국과 교류 강화

- MIT 디지털 바이오 석학들과의 대화(23.4월)
- 한-영 첨단바이오 석학 간담회(23.11월)
- 한-미 합성생물학 공동 컨퍼런스(23.11월)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 발표(23.6월)

생태계 조성

양자 핵심인재
2,500명
글로벌 인력 순환
500명

양자과학기술 발전

기술 수준
85%
양자 컴퓨팅 80%,
양자 통신/센서 90%

기술-산업 융합

세계 시장 점유율
10%
양자 기술 공급-활용 기업
1,200개

양자과학기술 대도약 원년 선포

- 한-미 공동성명 체결(23.4월)
- 양자 과학기술 및 양자 산업 육성에 관한 법 제정(23.10월)

10대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사업 선정

혁신형 SMR
핵심기술 개발

차세대
이차전지

6G 네트워크
산업기술 개발

AI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달탐사 2단계
(달착륙선 개발)

K-UAM
안전운용체계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반도체
첨단 패키징

바이오파우드리
구축

※ 사업의 실제 추진여부, 세부내용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변동 가능

12대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완성

| | | | |
|------------------|--|----------------|--|
| 반도체·디스플레이 | ▶ 저전력·고효율 AI 반도체 개발 ▶ 마이크로 LED 조기 상용화 | 인공지능 | ▶ 전력자원 소모량 절감 ▶ 인공일반지능 원천 기술 확보 |
| 첨단바이오 | ▶ 바이오제조 효율 혁신 ▶ 신물질 기반 치료제 | 양자 | ▶ 범용 양자컴퓨터 및 양자 네트워크 구현 ▶ 양자센서 5대 원천기술 확보·상용화 |
| 우주항공 해양 | ▶ 발사체·위성·달착륙선 기술 고도화 ▶ 우주부품 자립화 | 차세대 원자력 | ▶ SMR 안전성 제조기술 확보 ▶ 비경수형 원자로 기술 고도화 |
| 수소 | ▶ 그린수소 대량생산 기반 구축 ▶ 안정적 수소 저장·운송기술 확보 | 이차전지 | ▶ 리튬이온전지 상용 기술확보 |
| 차세대통신 | ▶ 6G 기술 개발 및 표준특허 선점 | 사이버보안 | ▶ 차세대 보안 기술 적용 |
| 첨단 모빌리티 | ▶ 완전자율주행(27, Lv4) 대비 인공지능 표준·인증 선점 | 로봇제조 | ▶ 인간 수준 자율로봇 기술 고도화 |

미래 청사진

2027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

*최고 기술 보유국 대비 90% 이상

초격차 기술
6개 이상
확보

2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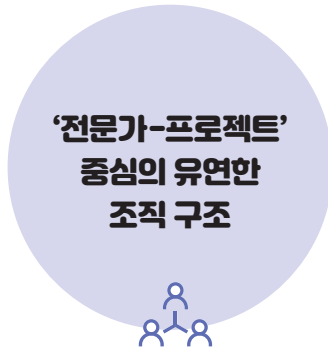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기틀 마련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은 우주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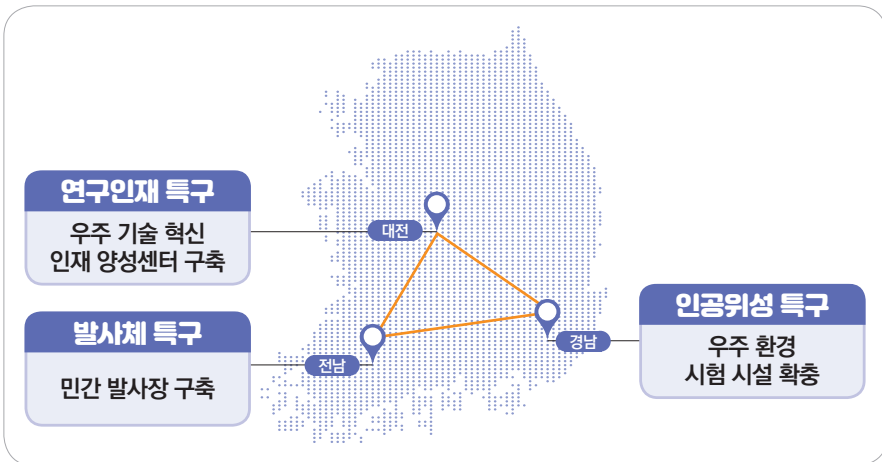
|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 2024.3.13. |

우주항공청 개청('24.5.27.)

법을 공포(1.26) → 법률 시행 및 업무개시(5.27)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24.3월)



누리호 3차 발사 성공('23.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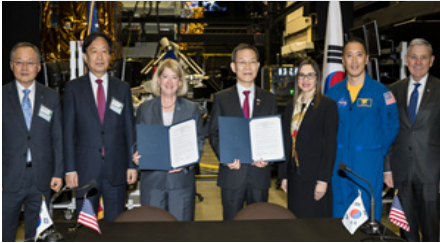
-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자력 발사할 수 있는 **우주산업 시대 개막**

달 궤도선 '다누리' 달 탐사 임무수행 성공 ('23.12월)



- 세계 최초** 달 궤도선 **월면 관광 관측 성공**
- 우라늄, 토륨 등 **광물지도 작성 성공**

한·미 우주탐사 및 우주과학 협력 공동성명('23.4월)



**우주통신·항법 및 우주과학 분야
한·미 협력강화**

미래 청사진

뉴 스페이스 시대, 민간 협력으로 세계 5대 우주강국 도약

| | | |
|---------------------|--|------------------------|
| 2023 700개+ | 우주항공 기업수 3배 증가 혁신 지향 강소기업 육성으로 산업기반 강화 | 2045 2,000개+ |
| 2만 명 | 우주항공 일자리 25배 확대 양질의 일자리와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 50만 명+ |
| 3개 한화, KAI, 대한항공 | 우주항공 100대 기업 3배 배출 우주항공 글로벌 선도 기업 육성 | 10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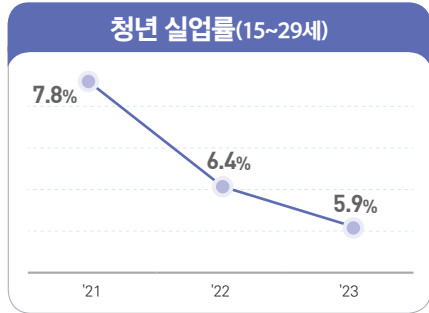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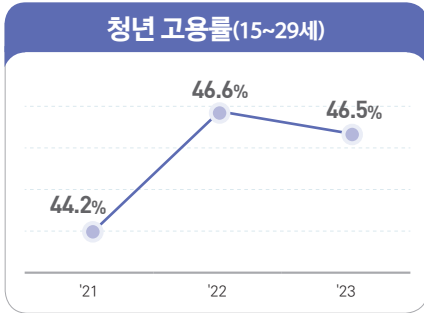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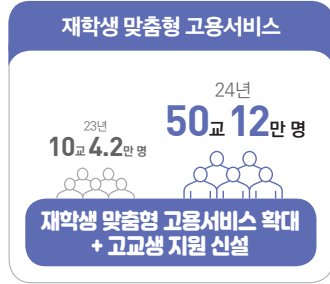


미래를 위한 청년 지원 확대

“청년에 대한 지원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정부는 청년의 든든한 후원자이며, 청년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024.3.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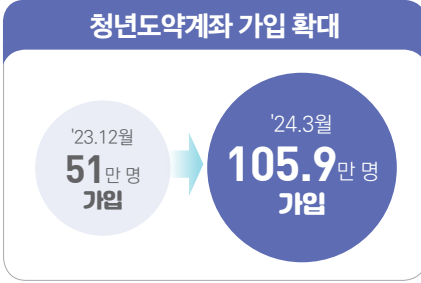
청년 일경험 사업 확대



청년 주거사다리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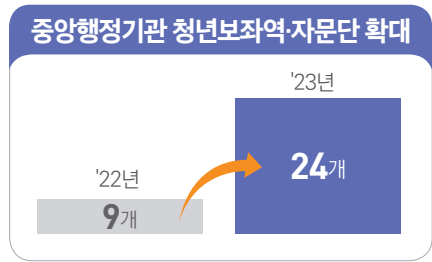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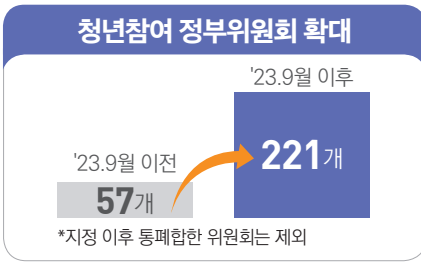
청년 자산형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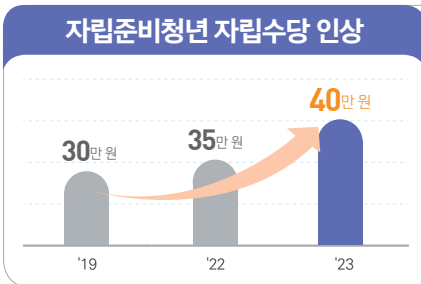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 우대금리 지원**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7%p)
- 당첨시 **저리 장기대출**
(최저 2.2%, 최장 40년)
- 결혼, 출산, 다자녀 시
추가 금리인하

국정운영에 청년 참여 확대



취약청년 지원 강화



가족돌봄 청년 지원

- ☑ 일상돌봄 서비스
('23년 2,250명→'24년 6,000명)
- ☑ 원스톱 통합지원 2,400명, 자가돌봄비
(연 200만 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

- ☑ 청년미래센터 신설, 원스톱 통합
시범지원 실시(96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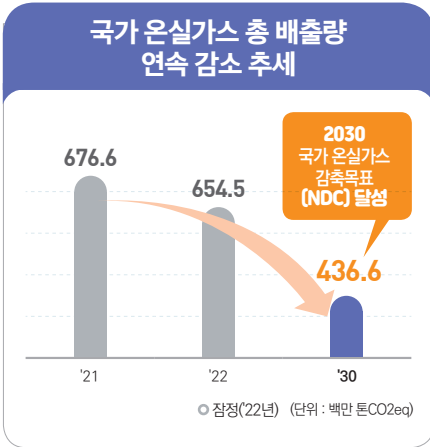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추진

“기후위기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대한민국은 기후격차 해소에 책임있게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 APEC 정상회의, 2023.11.16 |

무탄소에너지 확대로 온실가스 배출량 지속 감소



아시아 국가 중 유일
'녹색 선도국(GREEN LEADER)' 인정

총 **76**개국 중 **8**위

* 엠아이티 기술평가 보고
(MIT Technology Review, '23.3월)

녹색인프라 수주·수출 20.5조 원 달성

녹색인프라 수주

오만 **그린수소**
우즈베키스탄 **매립가스 발전**
UAE **해수담수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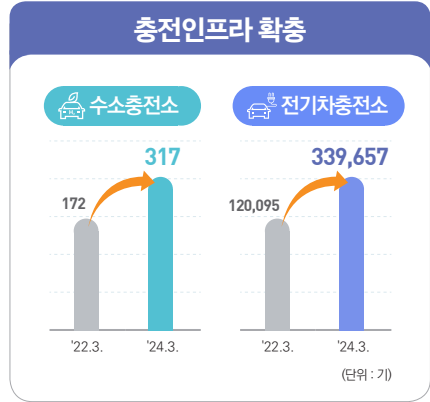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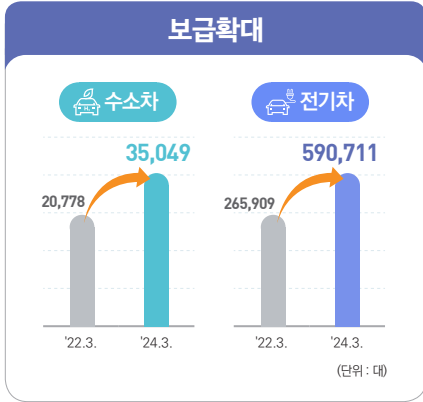
총 **15.8**조 원 수주
('23년 기준)

녹색제품 수출

기후대응
청정대기
스마트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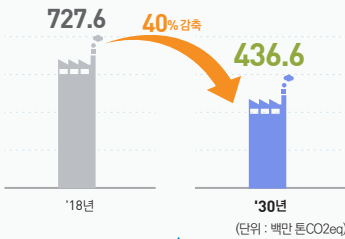
총 **4.7**조 원 수출
('23년 기준)

무공해차충전인프라 보급 확대



미래 청사진

과학과 합리에 기반한 탄소중립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달성

지속가능한 녹색산업 해외진출 기반 구축



무공해차 전환가속화

2027년까지 **220만 대** 보급예정
2030년까지 **450만 대** 보급예정





교통혁신을 통한 격차 해소

“지역 간 이동속도를 높인 초연결 사회를 실현하여 출퇴근 교통문제 해소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024.1.25. |

GTX 시대 본격 개막

GTX-A 개통



※ 지하철 이용 시 79분,
버스 이용 시 75분 소요

GTX 차질없이 추진

- Ⓞ GTX-A 2024년 6월 구성역 개통, 2024년 12월 운정-서울 구간 개통 추진 중
- Ⓞ GTX-C 2024년 1월 착공
- Ⓞ GTX-B 2024년 상반기 전 구간 순차 착공 추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한 간선 교통망 확충

포천-조안 고속도로 개통(‘24.2월)

1968년
경인고속선 개통 이후
56년 만에
고속도로 **5,000km** 시대
개막

아산-천안 구간 개통(‘23.9월)

아산지역을
경부선에 연결하는
최초의 고속도로인
아산-천안 구간 개통

알뜰교통카드 혜택 강화 및 K-패스 도입

알뜰교통카드 이용에 따른
대중교통비 평균 절감액



K-패스 시행(24.5월)

- 알뜰교통카드의 편의성·혜택 개선
 - 월 대중교통 15회 이상 이용 시
지출금액의 일정비율* 환급
- * 일반(20%), 청년(30%), 저소득(53%)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및 가덕도신공항 본격 추진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지방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사업 본격 추진 중

※ 활주로 3,500m, 여객터미널 등 건설

미래 청사진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35년)

GTX 수혜 인구
일평균 183만 명
(1기 GTX 86만 명 대비 2배 이상 확대)

경제적 효과 약 135조 원,
고용창출 효과 약 50만 명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인재-생활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를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024.2.13 |

지방분권-균형발전의 통합 추진체계 구축



4대 특구 본격 추진

| 기회발전특구 | 교육발전특구 | 도심융합특구 | 문화특구 |
|---|---|---|--|
| 소득세·법인세 등 인센티브 마련 및 시행 (24.3월) | 1차 시범지역 31개 선정·발표 (광주, 인천 강화 등) | 5개 광역시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 | 문화도시 예비사업 13곳 조성 계획 승인 (대구 수성구, 경기 안산시 등) |

중앙권한 지방 이양 및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 강화

지방 권한 이양

6개 분야 **57**개 핵심 권한

↓

17개 권한 지방 이양 완료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확대,
비수도권 공립 대학 정원·학과 조정 등

중앙-지방 소통·협력 강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19회

**지방소멸 대응기금 개선,
중앙권한 지방 이양 등 추진**

새로운 정책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

고향사랑기부제 첫 시행

'23년

약 **52**만 명 참여,
약 **650**억 원 모금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도입

1호 시범사업 선정 ('24.3월)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프로젝트

경북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기반 마련

미래 청사진

살기 좋은
지방시대 본격화

+

수도권 인구집중도
50% 이하 목표
(’27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V

외교
안보



한미일 협력 강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 2024년 대통령 신년사, 2024.1.1. |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 구축

12년 만의 우리 정상 국민 방미(*23.4월)



정상
외교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업그레이드

안보

「워싱턴 선언」에 따른
핵협의그룹(NGC) 신설로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경제

첨단산업 70억 달러 투자 유지,
한미 차세대 핵심신기술(CET)
대화 최초 개최

한일 셔틀외교 복원 및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

한일 셔틀외교 복원(*23.3월, 5월)



정상
외교

12년 만의 정상 상호방문
실현으로 셔틀외교 복원

경제

화이트리스트 복원
10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체결

민간교류
재외국민
보호

인적 교류 928만 명 달성(*23년),
무력충돌 시 양국 국민 철수
상호 지원(수단 등)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 개막

사상 최초의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
(‘23.8월, 美 캠프데이비드)



협력제도화

3건의 문서 (‘정신’, ‘원칙’, ‘공약’) 채택
→ 한미일 협력 핵심 골격 완성

안보

北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가동, 다년간 3자 훈련계획 수립
→ 역내 평화 안정 기여

미래 청사진

한미일 협력체를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서 확대 발전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 제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2023.9.20. |

국제평화·안보 수호 및 보편적 가치 증진 기여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진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24. 3월)



우리 외교 지평의 확장

한-쿠바 수교('24.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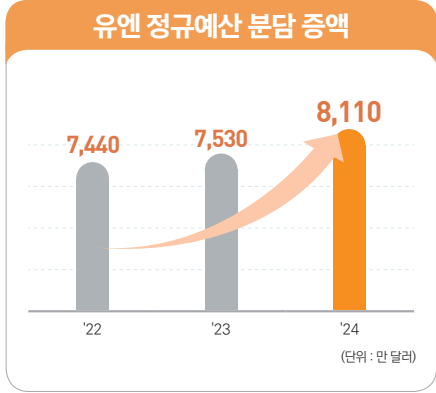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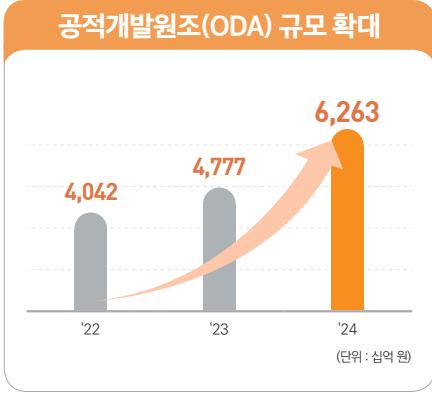
대 중남미 외교의 완성

한-태도국 정상회의 개최('23.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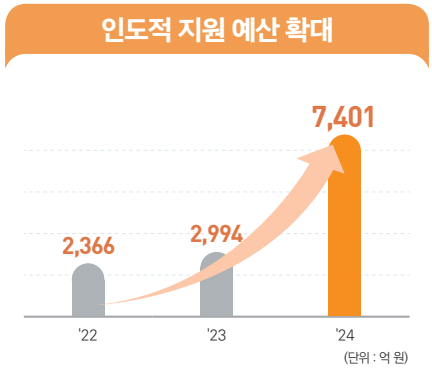


태평양으로 외교지평 확대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 기여 확대



인도적 지원 확대로 국제위기 대응에 기여



미래 청사진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세계 10위권 경제위상에 걸맞은
ODA 규모 확대(현재 15위)

G7 수준에 부합하는
가치기반 연대외교 실천

재외동포 지원 강화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와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 재외동포청 출범식 기념사, 2023. 6. 5. |

역대 정부 최초, 재외동포 전담기구 ‘재외동포청’ 신설

재외동포청 출범(’23. 6월)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법령

「재외동포기본법」
(23.11.10 시행)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23.11.10 시행)



정책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24-’28년, ’24.1.30.의결)

‘적극적 재외동포 보듬기’ 정책 추진

원폭 피해 동포 모국 방문(’23. 9월)



**역대 정부 최초
원폭 피해 동포·파독 근로자
모국 초청**

**총 21회 동포 간담회 등
약 200회에 걸친 국내·외 간담회
및 현장 방문**

원스톱·디지털 영사민원 서비스 확대

원스톱서비스

**재외동포
통합민원실**

법무, 보훈, 세금, 병무 등
**11개 다부처 민원서비스
통합 제공**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 확대

**‘영사민원24’
웹사이트** +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365일 24시간
5개 국어*민원 상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미래 청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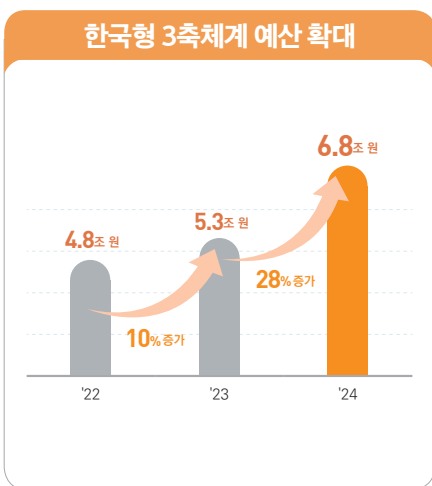


핵심전력 확보로 튼튼한 안보 구축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체계를 강력히 구축하는데 더욱 속도를 낼 것입니다.”

| 2024년 대통령 신년사, 2024.1.1. |

한국형 3축체계 능력 강화



한국형 3축체계

- 킬체인 (Kill Chain)** 핵·미사일 중요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파괴
- 한국형 미사일방어 (KAMD)** 미사일 공격을 조기에 탐지·경보 전파·요격
- 대량 응집정보복 (KMPR)** 북한 전 지역 전쟁지도부와 핵심시설을 대량응집정보복

무기체계 획득 패스트트랙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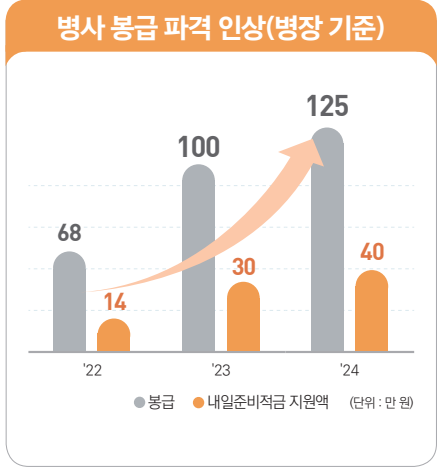
무기체계 특성에 맞는 획득방법 다변화

| 기존 | 개선 |
|------------------------|-------------------------------------|
| 군용으로 既 개발한 장비 구매 | ① 입증 기술 즉시 활용 가능 시 신속소요 획득 |
| 개발 필요 무기 연구개발 | ② 민수 제품 군 활용가능 시 시험사업 후 획득 |
| 약 14년 소요 | 3~5년 이내 전력화 |

장병사기 증진

장병 의식주 개선

- 급식**
기본 급식비
단가 인상
'21년 8,790원 → '22년 11,000원 → '24년 13,000원
- 피복**
모포·모단 → 상용이불
- 병영 생활관**
8~10인실 → 2~4인실



미래 청사진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국형 3축체계
2조 5,500억 원
투자 확대('27년까지)

+

패스트트랙 적용으로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 강화

'25년까지
월 최대 **205만 원 지원** (병장기준)

→

2024년
165만 원

→

2025년
205만 원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문화의 확산입니다.”

|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 서명식, 2023. 3. 2. |

250만 보훈가족의 숙원, ‘국가보훈부’ 출범



- ☑ 62년 만의 부(部) 승격
- ☑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보훈정책 추진의 기반 조성

자유로 가치를 국제사회와 연대

유엔군 참전의 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23. 7월)



- ☑ 정전 70주년 계기 국제 사회와 연대 강화

보훈대상자 자금심 고취와 보훈문화 확산

6·25참전유공자 제복 증정



순직군경 자녀 지원 <히어로즈 패밀리>



보훈가족 편의 증진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15종 → 1종)

기존

15종



개선

국가보훈등록증 국가유공자
 홍길동 123456-7890123
 건강보험 6월 1일
 보험번호 00-000000
 행정동민서 행정동 서당로80-97
 (서울동, 한빛사거리) 101동 2020호
 발행일 2023.06.05.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미래 청사진

생활조정수당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위탁병원 지정 확대

가까운 병원에서
편이 진료



안장 수요 적기 대응

18만기 확충 2026년까지

